

일본 대북정책의 메커니즘과 북일교섭

와다 하루키 지음, 길윤형 옮김, 『북일교섭 30년』(서해문집, 2023)을 읽고

최희식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I. 들어가며: 마지막 남은 전후처리로서의 북한 문제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교수는 소련·러시아사 연구의 거두이자 행동하는 지식인이다. 러일 북방영토문제와 중일 센카쿠 영토문제,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사할린 한인문제 등 한일 역사문제에 대해 역사화해와 진보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며, 시민운동단체를 만들고 주도하며 진보계열 정치가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해 왔다.

북한과의 수교 또한 와다 교수가 반평생을 바쳐 온 염원이었다. 그가 쓴 『북일교섭 30년』은 자신이 사무총장으로 일했던 ‘일조(日朝) 국교촉진국민협회’의 노력과 실패를 중심으로, 진보 지식인과 진보 정치가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북한과의 수교를 위한 노력이 어떻게 좌절되었는지를 분석한 책이다.

와다 교수도 기술했듯이, 일본에서 북한과의 수교를 마지막 남은 ‘전후 처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와다 하루키, 2024: 17-18).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기인하는 양국 간 관계의 정상화(전후 처리)는 일본이 온전한 평화국가, 건실한 민주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과의 수교 없이는 ‘일본의 전후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에게 냉전 시기는 매우 역설적 상황을 연출했다. 전후 민주주의가 신장하며 제국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평화주의가 뿌리를 내려갔고, 혁신세력(사회당과 공산당)의 상당한 의석 수 앞에 자민당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하면서도 공산주의 국가와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후처리로서의 북한 문제’는 정치권 내에서도 시민사회 내에서도 주류적 입장이었고, 국제정치가 조금이라도 긴장완화로 나아갈 기미가 보이면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움직였다(최희식, 2010). 즉, 전후처리로서 북한과의 수교 혹은 정상적 관계의 구축은 국내적 동력을 확보하고 있었고, 냉전 구도의 약화라는 기회 구조에서 용암처럼 분출했던 것이다.

스탈린 사후 소련의 평화공존 외교에 발맞춰, 북한은 1955년 2월 이른바 ‘남일 성명’을 발표하며 일본과의 무역 및 문화 교류를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첫 번째 기회의 창이 열렸다. 일본은 재일 동포의 ‘복송사업’으로 응답했다. 1970년대 데탕트의 대두로 또다시 열린 기회의 창은 북일 무역의 증대, 북일 ‘인민외교’로 결실을 맺었다.

두 번의 기회 모두, 자민당 정부는 북한의 제의에 적극 화답하려 했고, 국회의원들은 초당파로 ‘일조 우호촉진의원연맹’을 조직했으며, 시민사회에서는 ‘일조협회’, ‘일조무역회’, ‘일조 국교정상화국민회의’가 만들어져 북일관계의 국내적 장벽은 없었다. 오히려 장벽은 북한과 극심한 체제경쟁을 벌이던 한국의 반발이었다. 냉전은 냉전이었기에, 한국의 동의 없는 북일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다(신정화, 2002: 31-37; 高崎宗司, 2004: 16-20).

II. 새로운 구도의 형성: 국내 게임과 국제 게임

북일 국교수립 운동이 다시 불붙은 것은 1980년대였다. 1983년 전두환 정부는 중국·소련과의 국교수립 및 한반도 교차승인을 구상했다. 이에 호응하여 당시 나카소네(中曾根康弘) 내각 또한 교차승인을 미국에 제안했다. 1950~1970년대 두 번의 실패에서 오는 현실인식은 한국의 승인 없는 북일 접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하나의 한국을 고집하던 한국이 ‘두 개의 한국’을 제안하고 미국도

찬성한 이상 북일 접근의 외부 장벽이 없어진 듯 보였다. 거기에 노태우 정부는 1988년 2월 7·7 선언을 발표하며 북한이 미국·일본과 수교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와다 하루키, 2024: 23-34).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하는 북한과 탈냉전을 이용하여 전후처리를 종결하고 싶었던 일본, 양국의 의사가 합치되어 1990년 9월 가네마루 신(金丸信)을 단장으로 하는 자민당과 사회당 대표단이 방북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발표된 3당 공동선언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 식민지 지배 및 전후 45년간에 대한 배상이 합의되면서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신정화, 2002: 43-44).

하지만 1991년 1월부터 1992년 11월까지 8차에 걸친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은 성과 없이 좌초되었다. 이은혜 문제¹와 북핵 문제 때문이었다. 3차 회담에서 일본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본격적으로 핵사찰 문제를 북일 교섭의 의제로 올리자 하면서 교섭은 본격적으로 대립국면으로 전환되었다. 4차 회담에서는 이은혜 문제를 제기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일본인 납치문제가 최초로 북일 교섭의 의제로 등장하게 되었다(와다 하루키, 2024: 45-51). 이후 북일 교섭은 일정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납치문제, 핵·미사일 문제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였다.

납치 문제의 대두는 북일 교섭 반대파 그룹을 조직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납치의 상징이 된 요코다 메구미(横田めぐみ) 납치의혹이 1997년 1월 세간에 알려지면서이다. 북일 교섭 반대운동의 주축이었던 ‘현대 코리아’ 그룹의 사토 가쓰미(佐藤勝巳)가 처음 폭로한 요코다 메구미 사건은 가해자 일본이 피해자 일본으로 둔갑하는 계기가 되었다. 같은 해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연락회(이하 가족회)’, ‘납치의원연맹(이하, 납치의원)’,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는 모임(이하 구출회)’가 결성되었다. 이로써 일본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일본 국내 정치구도는 전후처리로서의 북한문제에 기반한 추진파와 납치문제에 기반한 반대파의 치열한 접전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¹ 1988년 1월 대항항공 폭파사건의 범인 김현희가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 납치된 이은혜로부터 일본어 교육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가 인지되기 시작하였다.

핵문제 또한 일본의 대북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만들게 되었다. 북핵 문제로 북미 간 갈등이 형성되면, 핵문제를 우선하는 미국 정책 때문에 일본의 대북 접촉에 족쇄가 될 수밖에 없다. 반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협상이 진척될 경우, 일본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려는 정부 내 움직임과 더불어 북일 교섭의 흐름이 형성되는 기회의 창을 제공한다.

결국 전후처리로서의 북한 문제, 납치 문제로서의 북한 문제, 안보 문제로서의 북한 문제가 연계되며, 일본의 대북정책은 국내 게임과 국제 게임, 두 게임의 영향을 받으며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후처리로서의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북일 교섭 추진파들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 위에 북한과 일본이 역사 화해를 이루고 국교를 정상화할 것을 주장한다. 반면, 납치 문제로서의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북일 교섭 반대파들은 북한을 가해자로 규정하고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 없는 국교 정상화를 극구 반대한다. 이 양자의 주도권 다툼 결과, 추진파가 주도권을 장악해서 북일 교섭이 전개되더라도, 북미 간 교섭이 교착상태 혹은 갈등상태에 빠지게 되면 북일 교섭 반대파의 힘을 강화시켜 북일 교섭이 좌초할 수 있다. 반대로 북미 간 교섭이 시작되거나 새로운 합의에 이르면 북일 교섭 추진파의 설득력이 높아져 북일 교섭을 향한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지만, 그에 따라 북일 교섭 반대파는 납치 문제를 프로파간다로 하여 필사적으로 저항한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북미 관계와 국민 여론의 향배에 따라 북일 교섭의 운명이 결정된다. 국내 게임과 국제 게임의 상호작용, 이러한 관점이 『북일교섭 30년』의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적 시각이다.

III. 치열한 접전

국내 게임과 국제 게임의 상호작용으로서의 북일교섭은 2000~2010년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10월의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의 방북은 기회의 창을 열어 주었다. 급기야, 2001년 1월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차관은 납치 문제를 북일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리며, 지금까지의 배상 요구를 철회하고 경제협력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을 일본에 타진했다(와다

하루키, 2024: 105-106).

북일 교섭 추진파들은 2000년 ‘일조 국교촉진국민협의회’를 조직하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결국,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수상은 2002년 9월 전후 최초로 북한을 방문한 수상이 되었다. 고이즈미의 방북은 철저하게 관저(官邸)가 주도하는 양태였다. 방북을 위한 교섭은 비밀외교로 진행되어,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과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외무성 아시아태평양국장 등 일부만 공유하고 있었고, 고이즈미 정권의 높은 지지율을 지탱하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부장은 배제되었다. 심지어 미국과의 사전 협의도 없었다(와다 하루키, 2024: 115-117).

북일 정상회담에서 ‘평양선언’이 채택되었고, 이는 현재까지 북일 관계의 기본 문서로 자리 잡고 있다. 평양선언에는 역사문제 및 현안사항을 포괄적으로 해결하여 북일 국교정상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천명되었다. 평양선언은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에 있어 걸림돌이 되었던, 역사 문제, 배상 문제, 납치 문제, 핵·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여 북일 국교정상화를 달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김정일은 납치 문제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함으로써 큰 진전을 보였다(船橋洋一, 2006: 47-49).

문제는 납치된 일본인 중 5명이 살아 있고, 8명이 죽었다는 북한의 납치 문제 조사 결과였다. 납치라는 국가적 범죄의 상징적 피해자였던 요코다 메구미와 아리모토 게이코(有本恵子) 두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전달되자, 아베 신조를 중심으로 하는 교섭 반대파는 적극적인 프로파간다를 전개하여 일본 여론의 대북 인식은 극히 악화되었다. 결국 고이즈미 정권은 10월 “납치 문제를 최우선 사항으로 처리해 나간다”는 기본 방침을 발표하며, ‘납치 역류’에 의한 국민 여론의 악화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고이즈미 정권의 대북 외교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 등 대북 강경정책을 주도하는 그룹, 후쿠다 관방장관과 다나카 외무성 아시아태평양국장 등 대북 대화 노선을 주도하는 그룹 사이에 치열한 갈등을 유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 구조는 고이즈미 1차 방북 이후 현재화되었다. 2002년 10월 15일, 북한은 생존한 것으로 알려진 납치 피해자 5인을 일본의 요구에 따라 ‘일시적’으로 일본에 귀국시켰다. 후쿠다 관방장관은 일단 약속대로 다섯 명을 돌려

보낸 후 추후 교섭을 통해 영구 귀국시키려고 했지만,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은 아베 관방부장관의 강경한 항의에 부딪쳐 결국 다섯 명을 돌려보내지 않았다. 북한의 반발은 예정된 것이었다.

이렇듯 아베 등 대북 강경파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북일 관계가 악화되는 듯 했으나, 다시금 다나카와 후쿠다의 리더십하에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고이즈미 수상의 재방북이 추진되었고 2004년 5월 고이즈미 수상은 두 번째 방북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납치 피해자 가족 3인을 일본에 귀국시켰고, 2005년 11월에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을 일본에 전달하며 납치문제의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위 유골이 DNA 감정결과 제3자의 것으로 판명되자 대북 여론은 다시금 격화되었다.

결국 이러한 갈등 구조는 대북 여론의 악화로 인해 아베를 중심으로 하는 대북 강경파의 승리로 귀착되었다. 외무심의관까지 승진하였던 다나카는 2005년 8월 퇴임하게 되고, 10월에는 관방장관으로 아베 신조가, 외상으로 아소 타로(麻生太郎)가 임용되면서, 대북 강경파가 전면 배치되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세력 관계의 변화는 국제 게임에서 북미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안보 문제로서의 북한 문제가 본격화되며 북일 교섭 반대파의 입지를 강화시켰기 때문이었다. 고이즈미 수상의 1차 방북 계획을 전달받은 미국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개발 의혹을 일본에 전달하며 북일 정상회담 시에 이를 언급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실제 2002년 고이즈미 1차 방북 직후 10월 3일 켈리 미국무 차관보가 방북했을 시 북한은 핵개발을 시인했으며, 이에 20일 파월 국무장관은 “미국으로서 북미제네바 합의를 무효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제2차 핵위기’가 시작되었고, 북미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북한 위협인식의 증대와 납치 피해자 문제가 결합하며 북일 교섭 반대파의 역습이 국민 여론에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와다 하루키, 2024: 141-142).

IV. 아베 노선의 국책화

2006년 9월 아베 정권의 수립은 북미 교섭 반대파의 우위를 가속화시켰다.

아베는 고이즈미 초기의 대북 대화 노선에 저항하며 납치 문제로 인해 격화된 여론을 이용하여 대북 정책의 수정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이에 아베 수상은 정권 수립 직후 9월 29일 수상 직속기구로 ‘납치문제 대책본부’를 조직하여 납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뜻을 명확히 했다. 10월 16일에는 “납치 문제의 해결 없이 국교정상화는 없다.”라는 인식을 구체화했다. 또한 자파 출신 나가야마 교코(中山燕子) 참의원을 새롭게 신설한 ‘납치 문제 담당 내각총리대신 보좌관’으로 임용하여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을 취하던 아소 타로를 외상으로 임명하는 등 대북 강경파를 전면에 포진시켰다.

특히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대북 강경노선을 더욱 강인하게 견인하였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14일 유엔 결의안 제 1718호를 성립시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실시하였다. 일본은 이보다 더 나아가 독자적 경제제재를 실시하였다. 10월 11일, 북한 국적 국민의 일본 입국 금지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14일에는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의 전면 금지, 만경봉호의 입항 금지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북일 교섭 반대의 승리를 고착화시키기 위해 아베 수상은 이른바 ‘납치문제 3원칙’을 정립했다. 제1원칙은 납치 문제가 일본의 최중요 과제라는 것이다. 제2원칙은 납치문제 해결 없이 국교정상화는 없다는 것이다. 제3원칙은 북한이 사망했다고 한 납치피해자는 모두 생존해 있고 따라서 납치 피해자 전원의 송환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와다 교수는 “아베 3원칙은 대화, 교섭, 해결을 부정하는 것이며, 교섭 결렬, 외교 단절, 적대행위를 개시하겠다는 원칙이나 다름없다.”라고 평가하고 있다(와다 하루키, 2024: 209-210).

아베 내각 수립 이후 아베 노선이 ‘국책화’되어 가는 과정이었지만, 한때 북일 접근이 시도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2011년 요코다 메구미의 아버지가 “북한에 대한 제재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꼭 기회를 잡아내 교섭을 해 줘야 합니다.”라고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교섭을 재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구원회’와 ‘가족회’도 새로운 운동방침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초당파 국회의원 조직인 ‘일조 국교정상화추진의원연맹’이 활동을 재개하며 북일 교섭을 위한 분위기를 형성해 갔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

방위위원장의 사망 발표는 북일 교섭 재개를 향한 움직임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와다 하루키, 2024: 246-250).

2012년 9월 다시 수상이 된 아베 신조는 2011년 이후 물밑 교섭을 해 오던 북일 접촉을 강화해 갔다. 결국 2014년 5월, 북일 스톡홀름 합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평양선언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일본이 요구한 잔류 일본인, 납치 피해자 및 행방 불명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대한 조사에 대해 북한은 포괄적이고 전면적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신 일본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스톡홀름 합의에 기초해 북한은 재조사를 실시했고 10월 교섭에서 북한의 자세한 보고가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보고서 접수를 거부했다. 아베가 만든 납치 문제 제 3원칙이 모든 납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는 전제하에 전원 귀환을 천명하였기에, 몇 명의 생존을 주장했던 북한의 조사 보고서를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와다 교수는 분석했다(와다 하루키, 2024: 271-274).

김정은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북일관계를 구축하려던 노력은 스톡홀름 합의의 실패 이후 완전히 좌절되었다. 아베 내각은 납치 문제 제1원칙에 입각해 일본 국민에 대해 납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며 ‘국민정신을 총동원하려는 정책’을 지속했다. 심지어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대외 홍보도 강화했다. 동시에 김정은 체제 하에 강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배경으로 납치 문제와 안보 문제를 연동시키며 대북 강경정책을 지속했다. 후임 수상들도 이러한 아베 노선을 계승하며, 아베 노선의 국책화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어 버렸다. 와다 교수도 북일 교섭 추진파의 패배를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V. 나가며: 일본 보수의 대북 전략-이데올로그와 현실주의자

와다 교수의 북일 교섭을 둘러싼 국내 게임과 국제 게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려진 결론은 명확하다. 북일 교섭 추진파와 반대파의 싸움에서 추진파는 철저히 패배하였다. 그것은 아베 수상의 납치문제 3원칙이 견고하게 계승되고 있

기 때문이다. 동시에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갈등이 안보 문제와 납치 문제의 연동을 가져와 북일 교섭 반대파의 입지를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일 교섭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납치 문제 3원칙의 수정이 필요하다. 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북미 교섭도 동시에 전개되는 호순환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책을 읽으며 풀리지 않는 의문이 존재했다. 북일 교섭 반대파의 정점에 서있던 아베는 왜 스톡홀름 합의를 이끌어 내었던 것일까? 이데올로그의 면모에서 탈피해 왜 현실주의자의 면모를 보였던 것일까? 이에 대해 와다 교수는 아베 수상이 북한과의 교섭에 나섰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와다 루키, 2024: 265).

(아베 수상은) 아베 3원칙을 밀어붙여 북일 교섭을 가로막고 북한을 세계 줄라매 붕괴시키려 생각했다. (중략) 김정일 정권은 간단히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다. 가족회의 변함없는 기대에 부응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총리직에 복귀했다고 허세를 부린 뒤였기에 어떻게든 김정일 정권과 마주해 교섭할 수밖에 없었다.

최소한 납치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 때문이라도 북한과의 교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본 보수의 전략을 읽어 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무는 것일까? 보수 내의 현실주의자들은 왜 북한에 접근하려는 것일까?

탈냉전 이후, 대북 정책을 둘러싼 일본 보수정치의 지형은 기실 미일동맹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 내에는 일본외교의 근간이 미일동맹이라는 것에 합의가 존재하지만, 미일관계를 어느 정도 상대화할 것인가, 아시아 외교(특히 대북 외교)와의 정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최희식, 2010). 예를 들면 1997년 주변사태법 등 미일 신가이드라인 관련 국내 법규 제정 과정에서 외무성 내부에 미일동맹의 위치설정을 둘러싸고 의견대립이 있었다. 당시 북미국 심의관이었던 다나카 히토시와 조약국장이었던 다케우치 유키오(竹内行夫) 논쟁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다(藥師寺克行, 2003: 68).

다케우치(竹内行夫)와 같이 미일안보체제가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의 대전제라는 종래의 외무성 사고방식에 입각하면, 일본 외교 안전보장 정책은 미국에 보조를 맞추

면 되는 것이다.

반면, 다나카(田中均)와 같이 미일안보는 일본 안보정책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입장에 서면, 주변사태법의 내용과 해석의 문제 만에 머물지 않는다. 미일안보 이외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 경제, 안전보장 면에서 깊은 관계에 있는 아시아 외교, 대부분의 석유를 의존하는 중동 외교 등 일본이 독자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가 수없이 대두된다.

이러한 의견대립은 고이즈미 방북을 둘러싼 내부 대립으로 이어졌다. 고이즈미 방북을 둘러싸고 미국은 너무 성급하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고, 자주외교의 측면을 강조하는 아태국 그룹과 대미 협조노선을 강조하는 북미국 그룹 사이에 격렬한 논쟁을 유발하였던 것이다(藥師寺克行, 2003: 22-29; 田中均·田原総一朗, 2005: 76-82). 고이즈미 방북을 주도했던 다나카 당시 아시아태평양양국장은 미일 동맹이 일본 외교의 주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국제정치에서의 자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외교의 지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북일 교섭을 적극 추진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하의 남북관계 개선 또한 북한 외교에서 일본이 소외될지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묘한 경쟁심을 발현시켰을지 모른다.

1990~2000년대 중반 북일 교섭의 핵심 행위자였던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당시 자민당 정조회장은 북일 교섭을 추진했던 이유를 2002년 4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와다 하루키, 2024: 63)

나는 그때 북일 관계를 타개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중략) 무라야마 정권이 무언가 큰 발자취를 남긴다면, 그것은 오키나와 기지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기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를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당시 자민당 내의 간부들도 그저 좋은 생각 아니냐고 말해 추진했던 것입니다.

가토 고이치의 발언은 미일 간 중요한 문제였던 오키나와 미군 기지의 축소 혹은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일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전략 감각인 것이다. 즉 오키나와 주둔 미군이 북한, 중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에, 북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위협이 줄게 되고 오키나와 주둔 미군을 감축하

거나 이전할 수 있게 된다는 구상인 것이다.

다나카 히토시의 전략 감각과 가토 고이치의 전략 감각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미일동맹과 북일관계를 연동해서 사고하는 것은 일치한다. 미국에 무조건 추동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국의 태도인가, 오히려 자국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그 위에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보다 성숙한 관계가 아닌가는 감각인 것이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면 할수록 이러한 전략 감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크림 전쟁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모두 러시아 제재에 나설 때, 아베 수상은 푸틴 대통령과 가장 많이 만난 외국 정상이었으며 러일 관계는 북방영토에서의 공동경제활동 합의 등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보였다. 아베 외교가 '전략적 자율성'의 측면에서 분석되었던 이유이기도 하였다. 스톡홀름 합의를 이루어 낸 현실주의자 아베의 모습이 다나카와 가토의 전략 감각과 중첩되어 보이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미일동맹을 더욱 성숙한 관계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교섭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일본 보수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존재한다. 그러기에 일본은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교섭을 추진할 것이다. 문제는 납치 문제라는 벽을 어떻게 이겨 낼 수 있을까이다. 일본 보수 이데올로그의 프로파간다는 정서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전후처리로써의 북한 문제' 관점에서 역사 화해에 기반해 북일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는 진보계열 및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주변화되어 가는 현재, 일본 보수 내, 이데올로그와 현실주의자의 대립은 일본 대북정책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투고일: 2024년 7월 20일 | 게재확정일: 2024년 7월 31일

참고문헌

신정화. 2002. "북한의 국교정상화제안과 일본의 대북한정책: 정부 자민당 및 사회당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18(2).

- 양기웅·김준동. 2006. “북일수교협상(1990-2006)의 결렬과 재개의 조건.” 『일본연구논총』 23호.
- 와다 하루키 지음. 길윤형 옮김. 2024. 『북일교섭 30년』. 서해문집.
- 최희식. 2010. “일본의 정치변동과 대북정책.” 『한국정치연구』 19(1).
- 田中均·田原総一郎. 2005. 『国家と外交』. 講談社.
- 薬師寺克行. 2003. 『外務省: 外交力強化への道』. 岩波書店.
- 高崎宗司. 2004. 『検証: 日朝交渉』. 平凡社.
- 船橋洋一. 2006. 『ザ・ペニンシュラ・クエスチョン— 朝鮮半島第二次核危機』. 朝日新聞社.